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사에서 인구포럼·청년간담회 등 인구전략 광폭 행보

- 미혼 청년 1,741명 지역정착 정책 1순위로 안정적 일자리(64.8%) 꼽아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 이하 '저고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공동으로 8월 27일(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무등홀에서 제43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 제43회 인구포럼 「떠나는 이유, 머무는 조건」에서는 '인구이동 및 기업이전과 정주여건'을 다뤘다.
- 첫 번째 세션은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람의 이동과 정주」를 주제로 인구이동 및 정주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지역 미혼 남녀의 만남, 양육가구 주거 이동과 양육 환경,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인식을 짚어봤다.
- 19~49세 미혼 1,741명이 응답한 바에 따르면 결혼 후 현 거주지에 남겠다고한 비율이 광역시 지역은 42.9%에 이르는 반면, 도내 읍·면 지역은 27.5%에 불과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결혼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착에 필요한 정책 1순위로는 안정적 일자리(64.8%)를 꼽았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를 주제로 지역기업현장에서 일자리, 인재, 정주여건에 대한 지역 기업·국민 패널의 토론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 한편 김진오 부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청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주거주 청년들과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인턴십 등 좋은 스펙 쌓기 기회조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에도 공평한 기회 제공 및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의견을 내었다.

- 저고위는 지난 6월 11일 개최된 청년간담회 이후 6월 24일 인구 포럼을 통한 청년 의견청취 등 청년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 김부위원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① 결혼·출산·임신·양육, ② 주거·금융, ③ 일자리·소득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후 김진오 부위원장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저고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간 인구문제 대응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김 부위원장과 시·도지사간 순회 면담의 일환으로 경북, 서울에 이은 세 번째 순서다.
- 김 부위원장은 민 시장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과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안정적 일자리 공급을 위한 광주역-전남대 일대 산·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조선대 일대 대학·의료 인프라 등을 활용한 UBRC* 조성 등 전남광주 인구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 * UBRC : 대학 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
- 민형배 시장은 “성장과 균형을 시정 운영 원칙으로 내걸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난 지역주도 성장,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정부 지원 유치 등을 통해 지역에 청년이 머무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진오 부위원장은 전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부원장 등을 만나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의료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 한편, 저고위는 오는 9월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정책범위에 인구의 지역이동과 지역 간 격차 및 지역소멸 완화가 포함된다. 이에 김진오 부위원장은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 등 인구의 지역정착 기회 확대와 지역의 정주인프라 개선, 지역활력 제고 방안 등을 담고 지역소멸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업지역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성근 (02-2100-1234)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경환 (02-2100-1238)